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¹⁾

오정근 (건국대, 한국경제연구원)

<요약>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는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에 힘입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다 199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최근 까지 소득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에 그 때를 전후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경제성장률, 높아지기 시작한 경제개방도, 가속화된 기술발전, 강성화된 노조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고령화의 진전,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성장률,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조직률 네 변수로 가정하고 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가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상승시에는 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경로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경로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취업자가 0.3%, 평균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용근로자는 0.7%, 평균 약 5만명 정도, 임시·일용직근로자는 0.3%, 평균 약 2만 명 정도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0.1%, 약 1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 증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는 최근 한국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1) 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보고서 (2012)를 수정 보완한 것임

<목차>

- I. 서론
- II.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 이론
 - 2.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 실증분석 결과
- III.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추이와 원인
 - 1.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추이
 - 2.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원인
- IV.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1. 분석모형과 통계
 - 2. 추정과 벡타자기회귀(VAR)분석
 - 3. 지니계수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와 하락 소요기간
- V.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VI. 경제성장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개선효과
- VII.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향
-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서론

근년 들어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사회안정망 확충, 보편적 복지 주장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득분배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양극화 해소와 복지 정책 이슈에 밀려 성장은 경제정책의 중요한 위치에서 밀려나 있는 느낌마저 든다. 과연 분배에만 역점을 두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분배문제도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나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정책을 잘 못 선택함으로써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만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역사는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주장이나 정치사회적인 구호에 의해서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복리가 잘 못 결정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과연 한국경제에서 소득분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년에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관한 올바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간단히 개관해 본 다음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추이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행하고 동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 이론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Kuznets(1955)의 ‘역U자 가설’이 대표적이다. ‘역U자 가설’이란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분배격차가 적는데 경제가 발전할 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다시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가설이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력이 저생산성 분야에서 고생산성 분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가 성숙하여 고생산성 분야가 경제전반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 다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uznets의 ‘역U자 가설’은 경제현상을 토대로 한 하나의 가설일 뿐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성장과 분배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분배는 단순히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고전학과 분배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부터다. 그 후 분배이론은 미시경제학의 한 장으로 포함되고 성장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면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현대주류경제학에서 실증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성장과 분배문제를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학파는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classical political economics)이고 그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후기케인즈학파(Post-Keynesian)다. 여기서 분배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참여하는 계층간의 사회적 생산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Kaldor(1956)의 이론을 보면 그는 우선 소득을 임금과 이윤으로 나누고 임금소득자의 저축성향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저축성향이 주어지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이윤의 비율은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기업가의 투자가 생산활동은 물론 임금과 이윤간의 분배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 성장과 분배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기술발전을 중시하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발전하면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는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이 성장을 증진시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omer 1986).

2.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 실증분석 결과

Kuznets의 '역U자 가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주로 1960~70년대에는 동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1980~90년대 들어서면서 동 가설을 반증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²⁾. 한국에서도 유항근(2000)은 70개국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역U자 가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안중범(2003)은 1963~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연구 결과 지금은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유경준 2006, p. 8).

그러나 소득분배구조에는 경제성장 외에도 개방화 기술진보 노조운동은 물론 고령화 1인가구증가 등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요인들을 제어하면서 분석해야 한다.

2) 이에 대한 요약은 유경준(2006) pp. 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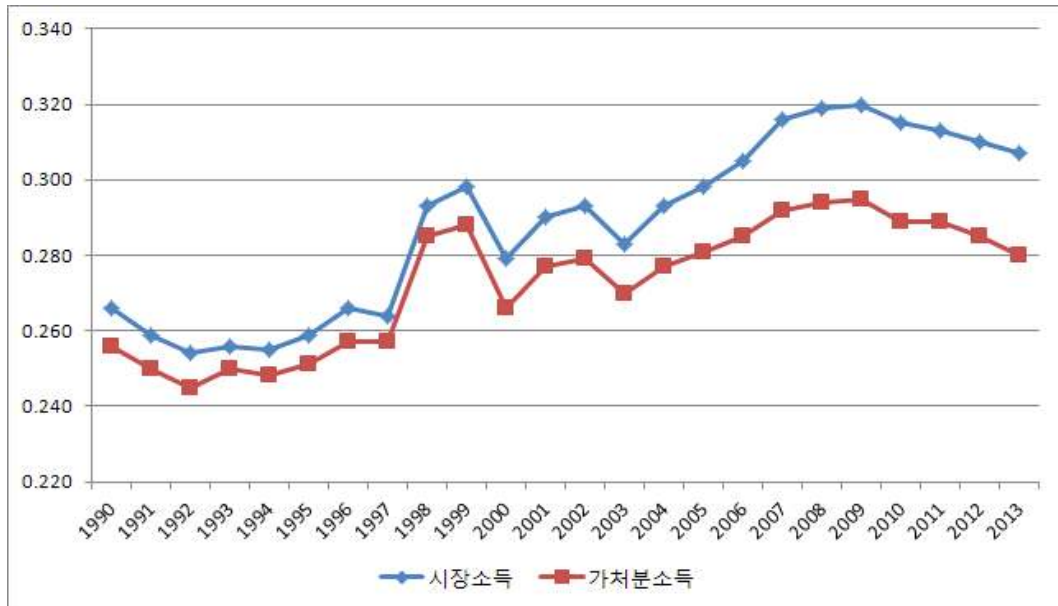
III.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추이와 원인

1.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추이

지니계수를 통해 본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고도성장에 따른 고용과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다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1997년 말의 금융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직사태가 발생하면서 1997년의 0.264(시장소득기준)에서 1998년에는 0.293으로, 그리고 1999년에는 다시 0.298로 큰 폭 상승하였다.

금년위기가 끝난 2000년에 지니계수는 0.279로 하락하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 1993년 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소득분배구조가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 악화추세는 지니계수가 0.320을 기록한 2009년 까지 지속된 후 2010년 부터는 소폭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소득³⁾ 또는 가처분소득⁴⁾ 기준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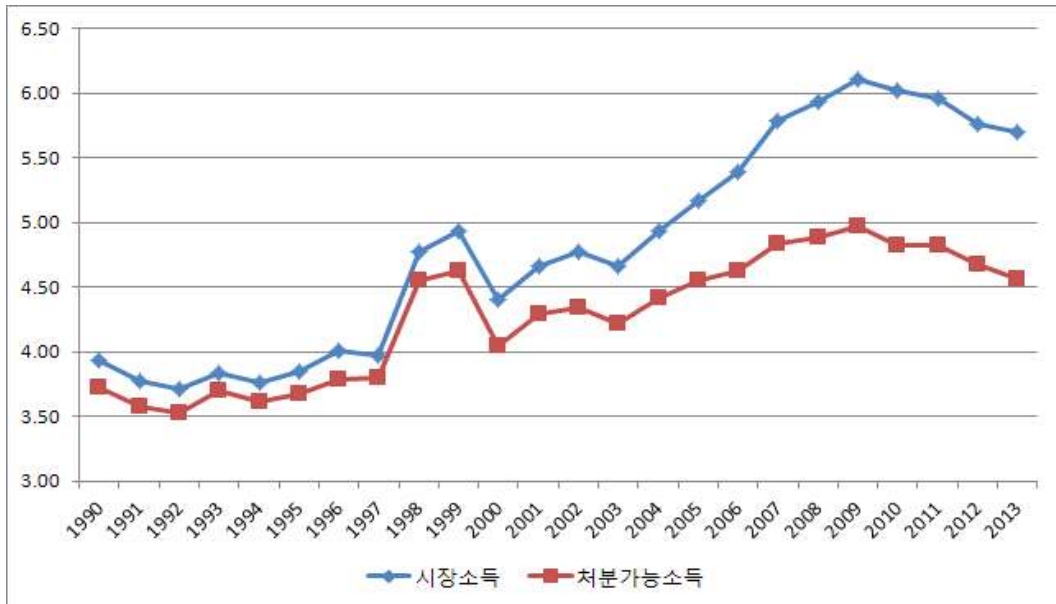
그러한 모습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3) 시장소득(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4) 가처분소득=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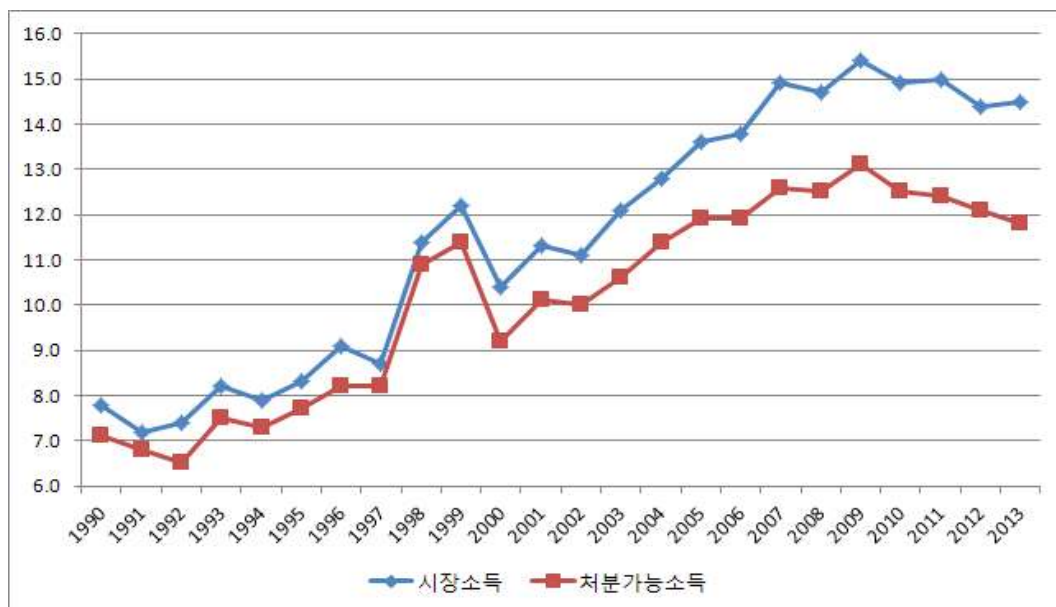
나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중으로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5분위 배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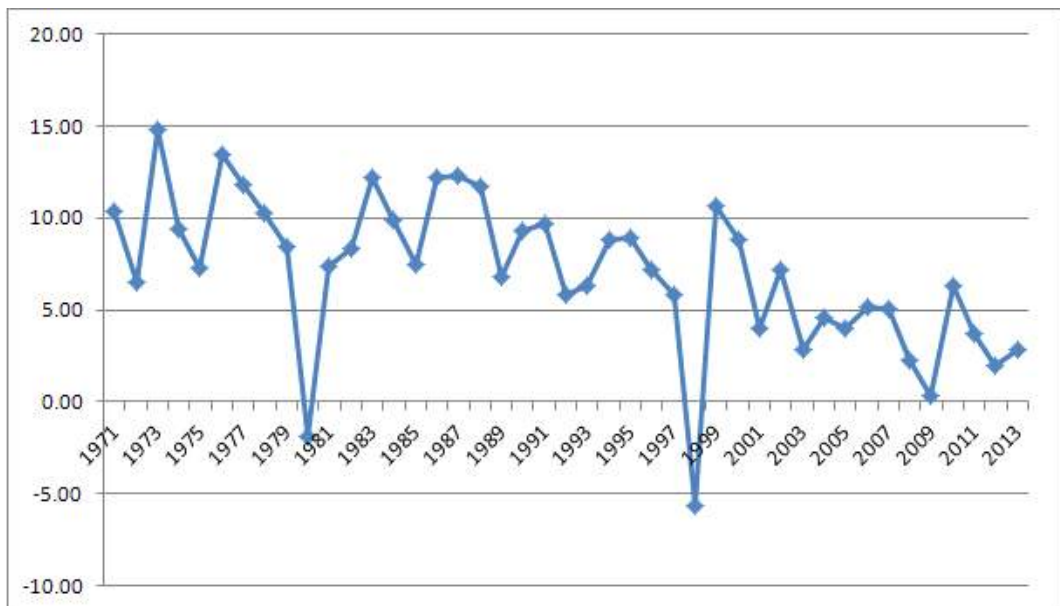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변동 원인

이와 같이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으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경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소위 “1987년 체제” 이후 1989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1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9.6%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성장률은 5.6%로 하락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89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그 결과 구직단념자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취업자가 감소하여 고용률이 하락하며 취업자 가운데서는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이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1993년부터 시작된 추세적인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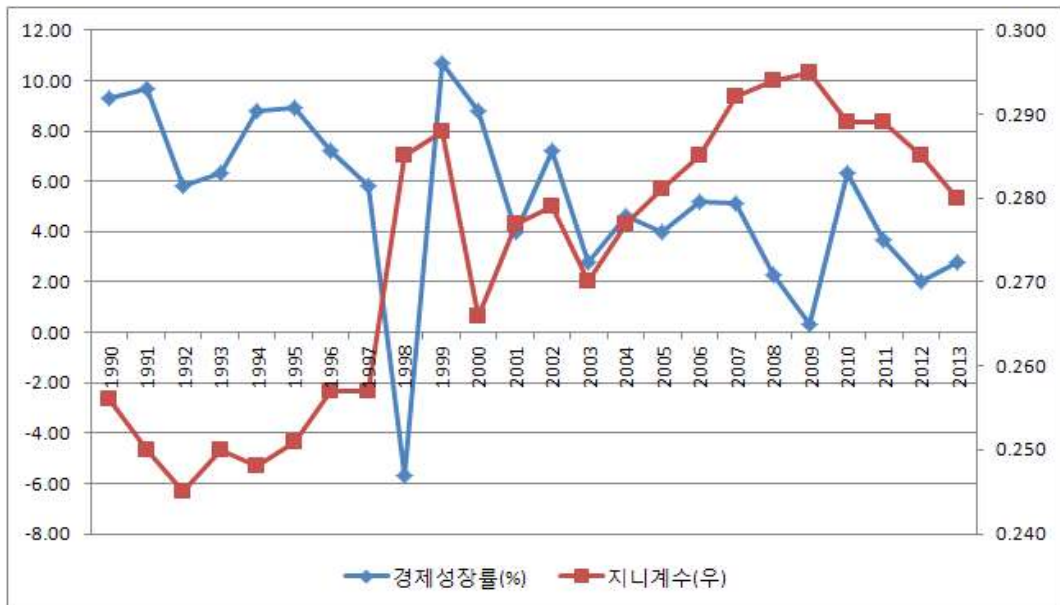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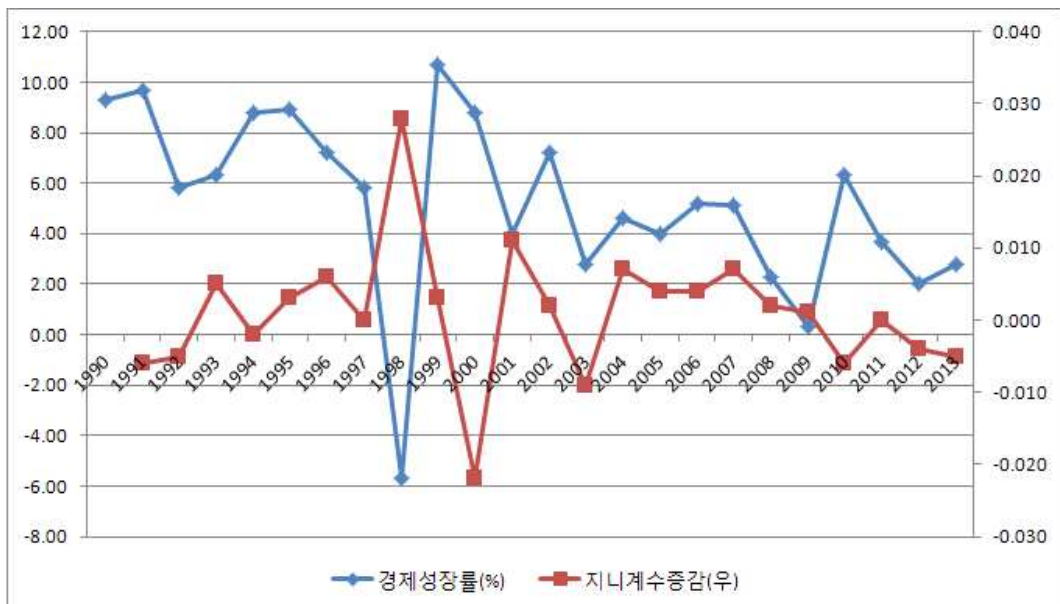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엄밀한 실증분석에 앞서 우선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5>는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성장률과 지니계수 간에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성장률과 지니계수증감을 비교한 그림에서도 두 변수 간에 대체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6> 성장률과 지니계수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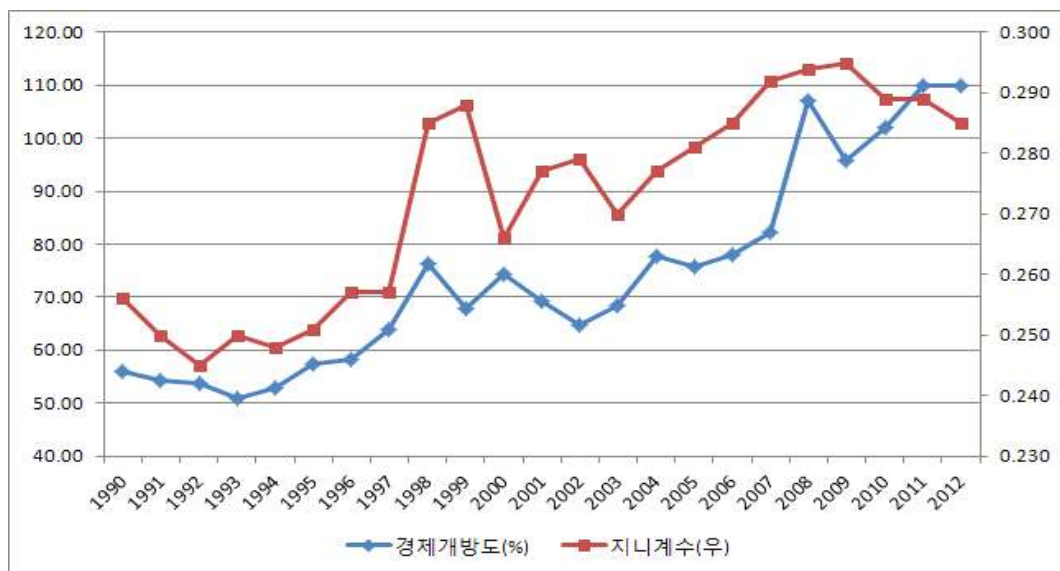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요인이 경제의 개방화다. 1980년 대 중반부

터 가속화된 한국경제의 개방화는 해외수출증가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수출증가는 악화되고 있는 국내투자와 성장 환경 하에서 그나마 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수출기업과 연관산업의 고용사정은 개선된 반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외국 중간재나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수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간의 임금격차를 크게 하여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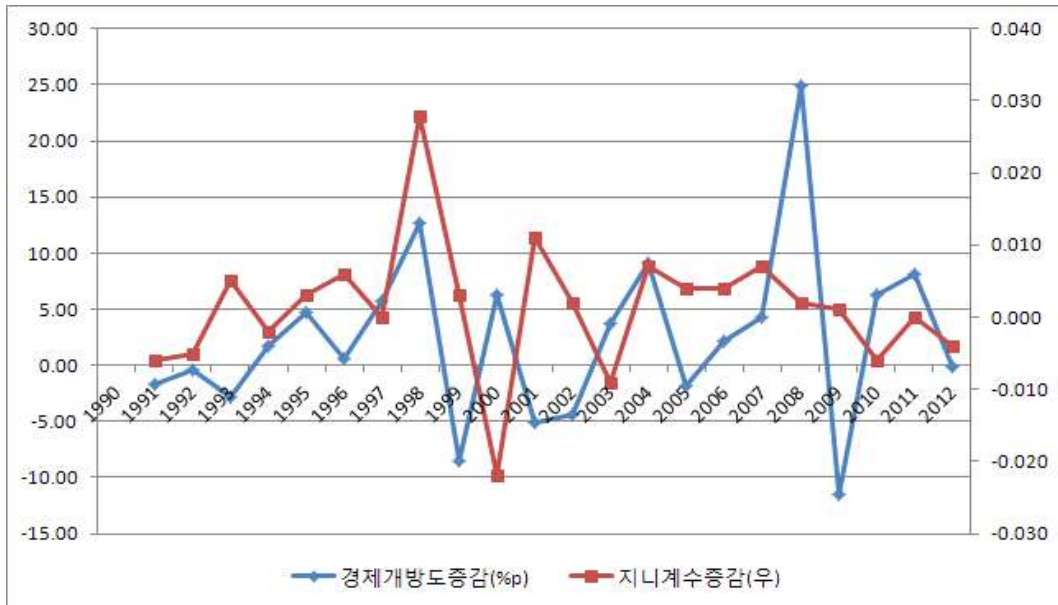
수출과 수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살펴 본 한국경제의 개방도는 다소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1993년 51%를 저점으로 2011년 11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개방도와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비슷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개방도증감과 지니계수증감을 보면 1990년대 중에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서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방도가 증가함에도 2000년대 들어서 부터는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만큼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경제개방도와 지니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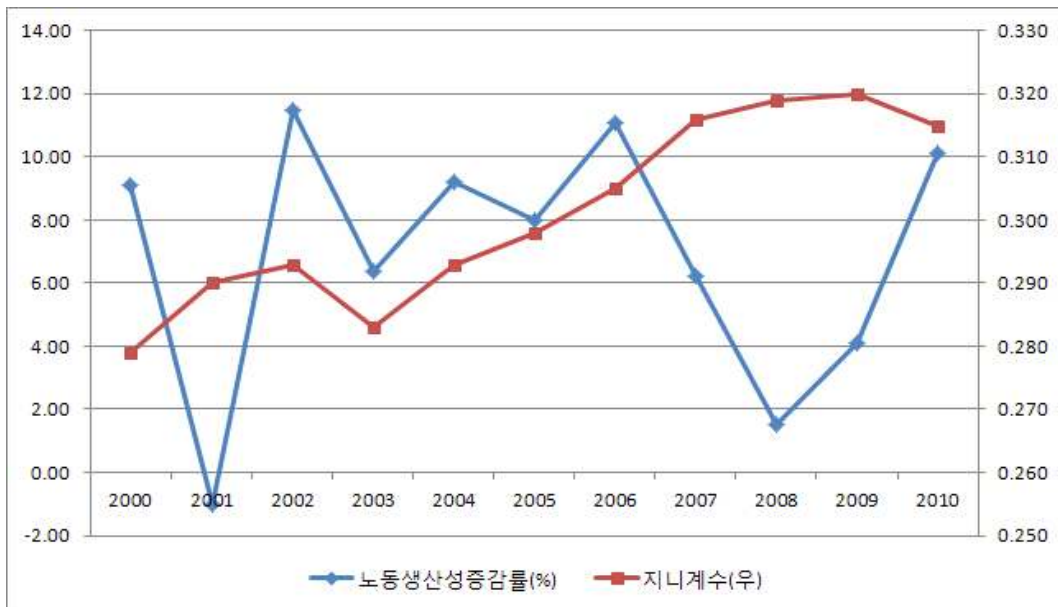
<그림 8> 경제개발도증감과 지니계수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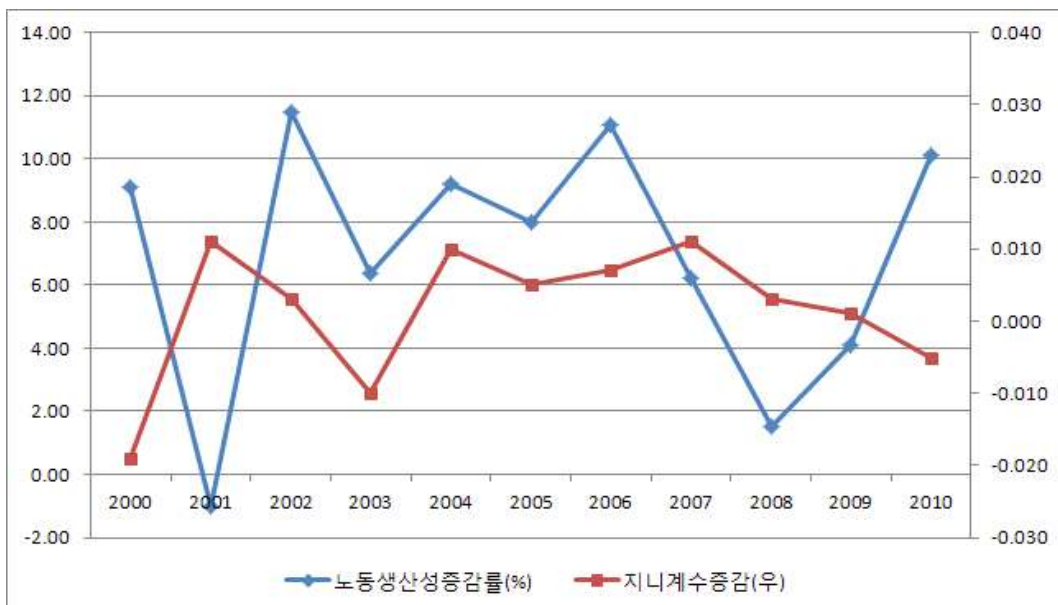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기술진보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고기능 고임금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기능 저임금 근로자의 수요를 감소시켜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Kruger 1991).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계하는 물적노동생산성지수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9>는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그림 10>은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지니계수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그림 모두 두 변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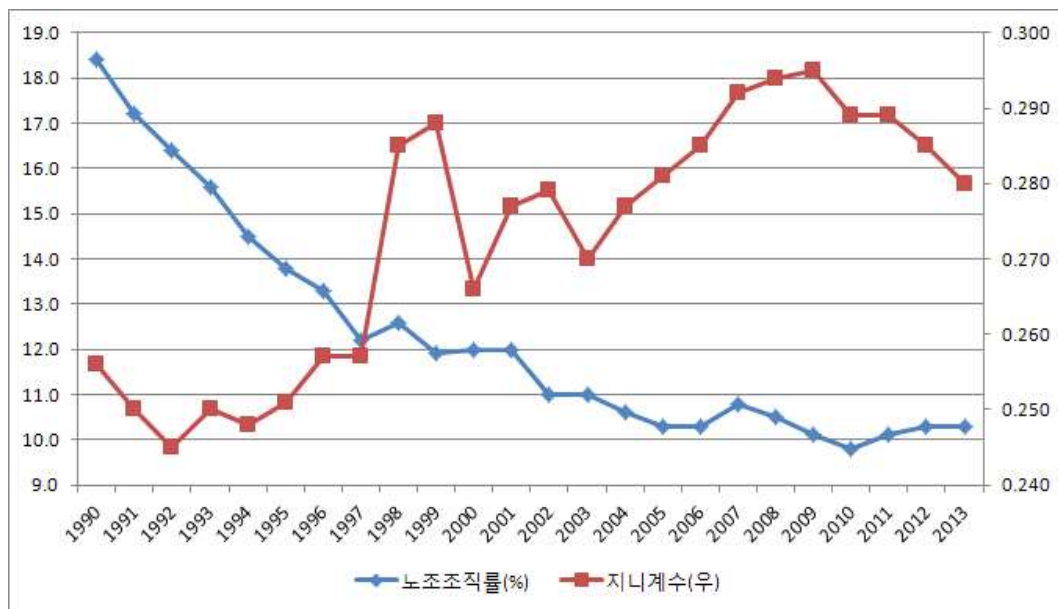
<그림 10>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지니계수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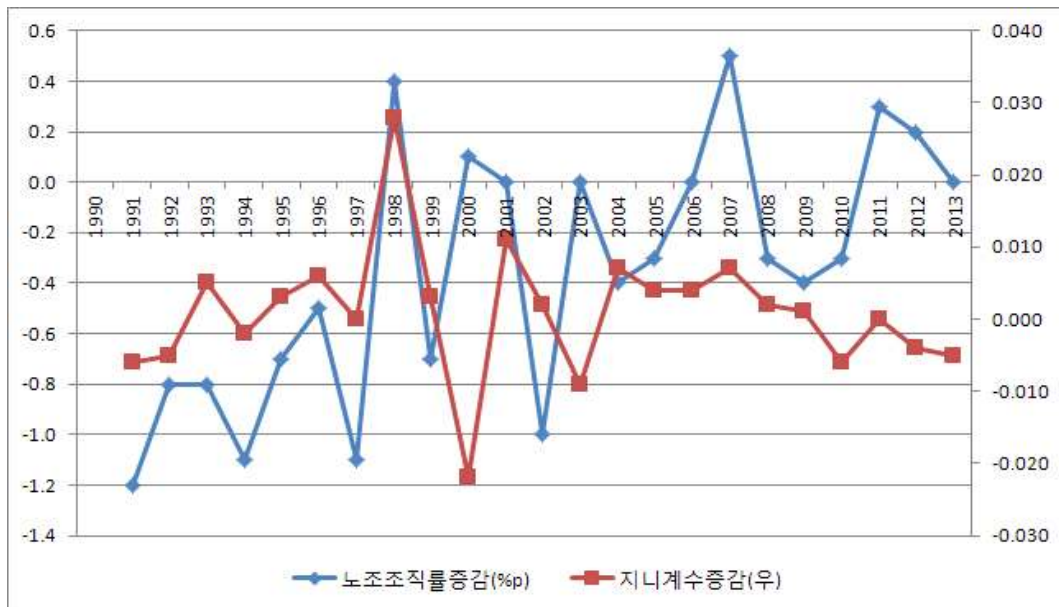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노동조합조직률이다. 노동조합조직률은 소득분배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아지면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임금근로자 간에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노조조직률은 1990년의 18.4%에서 2010년 9.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반면 지니계수는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면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처럼 지니계수 증감과 노조조직률증감을 비교해 보면 두 변수 간에 시차를 두고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등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1> 노조조직률과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2> 노조조직률과 지니계수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IV.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과 통계

이상에서 소득분배구조 변동추이와 소득분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가지 요인들과 소득분배구조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일대일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결정요인이 아닌 설명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처럼 보이거나 결정요인인 경우에도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소위 “변수누락문제 (missing variable problem)”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설명변수의 피설명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설명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앞에서 살펴 본 네 가지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회귀분석을 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분배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gini)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성장변수로는 실질국내총생산(gdp), 기술진보 대용변수로는 물적노동생성지수(prod)를 경제개방도는 수출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open)을 사용하고 노동조합조직률은 노조조직률 통계 (labor)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연대수에 대한 자연대수비율의 방식으로 독립변수의 증감률에 대한 지니계수의 증감률 탄력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모든 변수를 자연대수로 변환(lgini lgdp, lprod, lopen, llabor)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수에 대하여 안정성여부를 검정하는 단위근 검정을 행하였다.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이 있는 I(1) 시계열로 나타났으나(부록 단위근 검정결과 참조) 이들 변수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행한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공적분 검정결과 참조). 따라서 지니계수(lgini), 실질국내총생산(lgdp), 노동생성지수(lprod), 경제개방도(lopen) 및 노조조직률(labor) 변수를 추정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인과관계 검정

본격적인 함수추정에 앞서 우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랜즈(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행하였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그랜즈(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위하여 우선 두 변수 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요한센 공적분 검정결과 두 변수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공적분 검정결과 참조). 두 변수 간에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므로 두 변수 간 그랜즈(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행

하였다. 인과관계 검정결과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랜즈 인과관계 검정결과 참조).

일반적으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분배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소득분배가 인적자본개발 투자와 같은 성장친화적 분배인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분배가 단순히 시혜적인 분배인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준경 2004). 한국에서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가 인적자본개발 투자와 같은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추정과 벡타자기회귀(VAR)분석

소득분배모형의 기본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gini = a_0 + a_1 * lgdp + a_2 * lprod(-1) + a_3 * lopen(-1) + a_4 * llabor$$

lgini: 지니계수의 자연대수

lgdp: GDP(10억원, 2005년 가격기준, 불변)의 자연대수

lprod: 노동생산성지수(2008=100)의 자연대수

lopen: 경제개방도(%)의 자연대수

llabor: 노조조직률(%)의 자연대수

위 추정식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 (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에서 추론했던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고용안정을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경제개방도 증가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가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상승시에는 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충격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네 변수 (*lopen(-1)* *lprod(-1)* *lgdp* *lgini*)와 (*llabor(-1)* *lopen(-1)* *lgdp* *lgini*)로 구성된 두 모형에 대하여 벡타자기회귀(VAR)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 함수를 살펴보았다 (부록 VAR모형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참조).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경제성장은 2년 간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은 1~2년 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조조직률과 경제개방도 증가는 소득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 소득분배모형 추정 결과

	LGINI
C	2.165203
(t값)	1.420743
LGDP	-0.324710
(t값)	-2.467697
LPROD(-1)	0.205127
(t값)	1.746098
LOPEN(-1)	0.141460
(t값)	2.359604
LLABOR(-1)	-0.208141
(t 값)	-1.563923
R-squared	0.916123
D. W.	2.080203

4. 지니계수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와 하락 소요기간

위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지니계수가 가장 낮았던 1992년과 가장 높았던 2009년 간의 지니계수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해 보았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가 가장 높았던 2009년에는 0.295였고 가장 낮았던 1992년에는 0.245였다. 차이는 0.050이었다. 이 차이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각 요인의 2009년과 1992년 (노동생산성 경제개방도 노조조직률은 시차를 고려하여 2008년과 1991년)의 자연대수 값의 차이로 구한 기간 중 증감률에 위 식에서 추정한 각 요인의 추정계수를 곱하여 요인별 변동요인의 대수값을 구하고 이를 지수화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각 요인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구하였다.

지니계수 변동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기간 중 지니계수 변동분 0.050 중 경제성장률이 0.008, 경제개방도가 0.013, 노동생산성증가률이 0.011, 노조조직률이 0.011의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의 저하, 경제개방도는 개방도의 증가, 노동생산성증가률은 노동생산성 증가, 노조조직률은 노조조직률의 하락이 각각 지니계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 2009년과 1992년 지니계수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

경제성장률	0.008
경제개방도	0.013
노동생산성증가률	0.011
노조조직률	0.011
기타	0.007
지니계수 차이	0.050

다음으로 2009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니계수가 다른 변수가 동일할 경우 1992년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추산해보았다. 위 추정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만약 지니계수를 지금부터 5년 후인 2017년에 1992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12~2017년 중 연평균 14%의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1992년 이후 2009년까지 지난 17년 간 상승해 온 지니계수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현실적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3% 지속되는 경우와 5%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다른 변수가 동일한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3%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25년 후인 2037년에, 5%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14년 후인 2026년에 가서 1992년 지니계수 수준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2년부터 2009년 까지 17년 간 지니계수가 상승해 온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5.1%였기 때문에 동 기간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향후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표 3> 1992년 지니계수 달성 소요기간 및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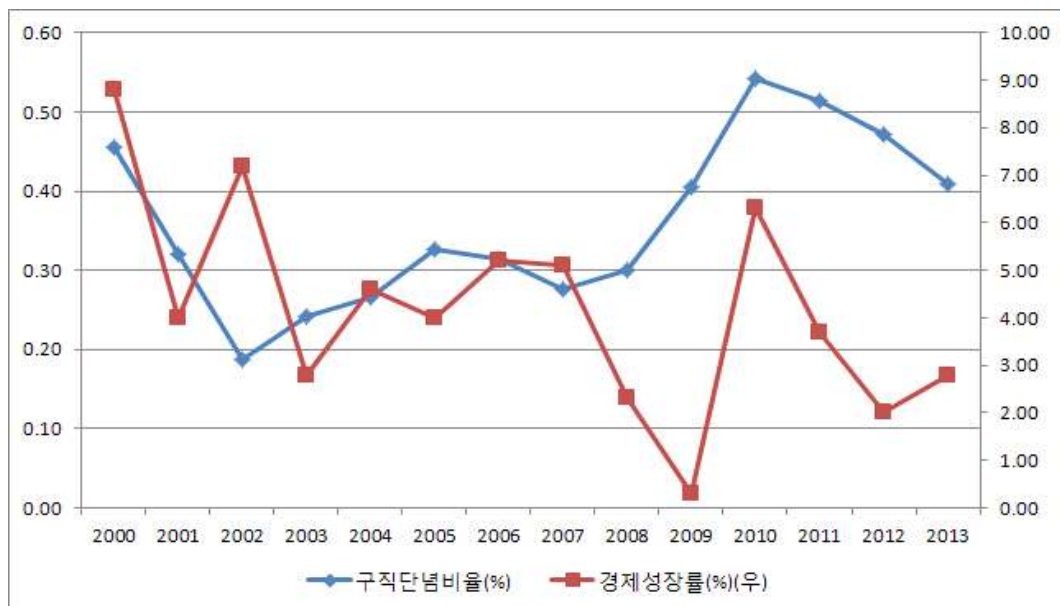
	소요 기간	달성 년도
연 평균 경제성장률 3% 지속 경우	25년	2037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 5% 지속 경우	14년	2026년

V.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위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경제성장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장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첫째, 경제가 성장하면 우선 일자리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없던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일자리창출경로, 둘째, 경제가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저소득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일자리개선경로, 셋째,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증가하여 복지 지출 등 보다 많은 재분배가 가능하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소득재분배경로, 넷째,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소비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성장의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경로와 일자리개선경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경제가 성장하면 구직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구직단념자⁵⁾가 줄어든다. 구직단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두 변수 간에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구직단념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구직단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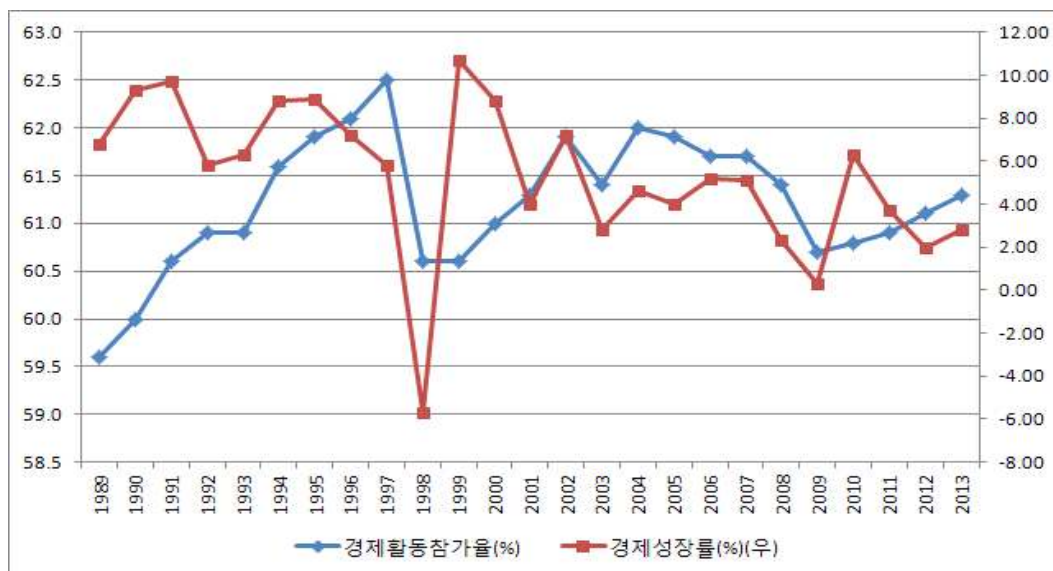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구직단념자란 노동시장적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되며 구직단념비율=구직단념자/15세이상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차적으로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그 만큼 소득 없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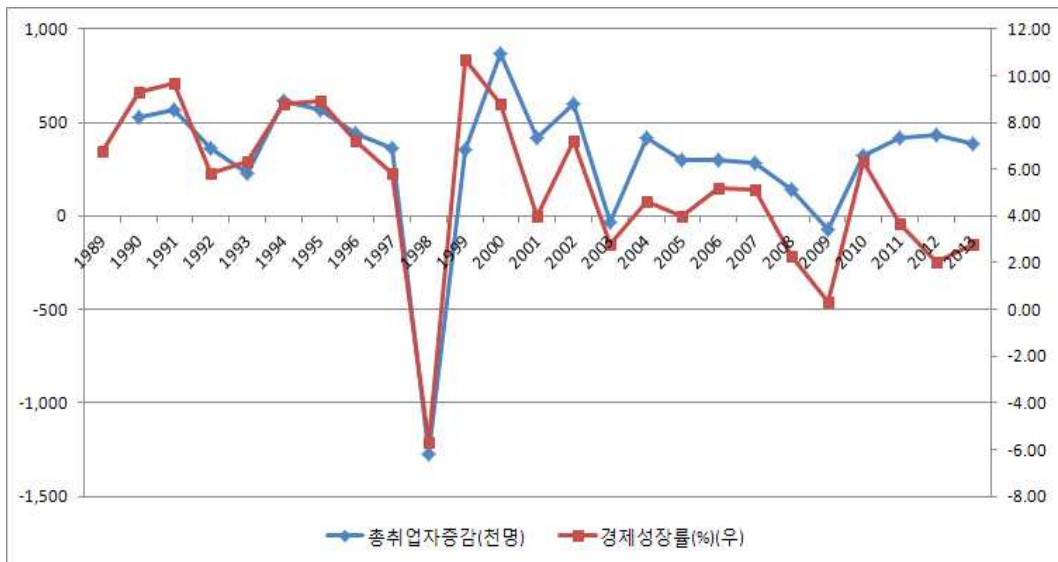
<그림 14>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둘째로 중요한 변수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증감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의 증감 추이를 보면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2011년 이후 취업자 중 은퇴한 베이버부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의 증감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영세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이차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감소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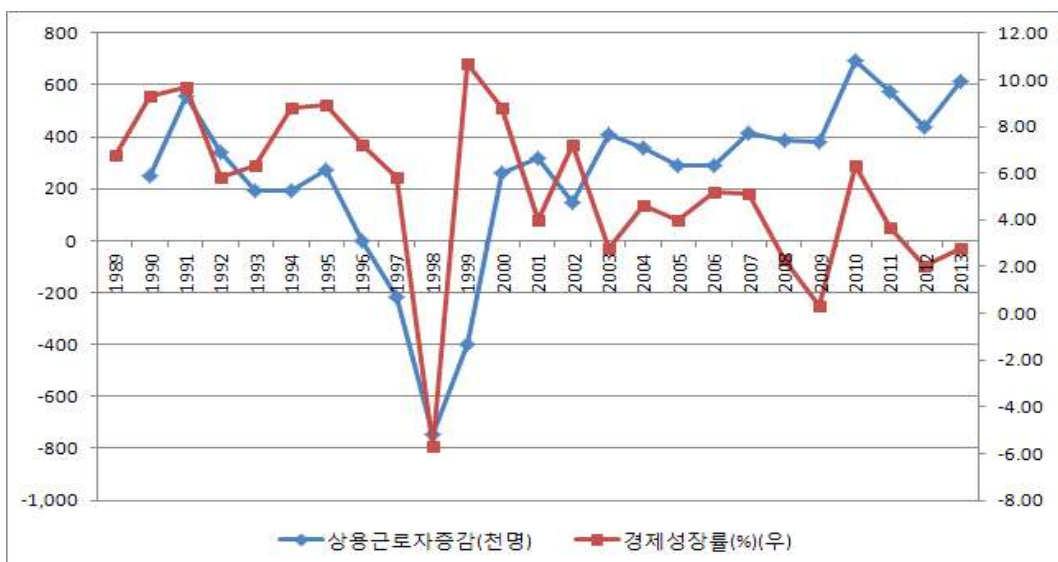
<그림 15> 총취업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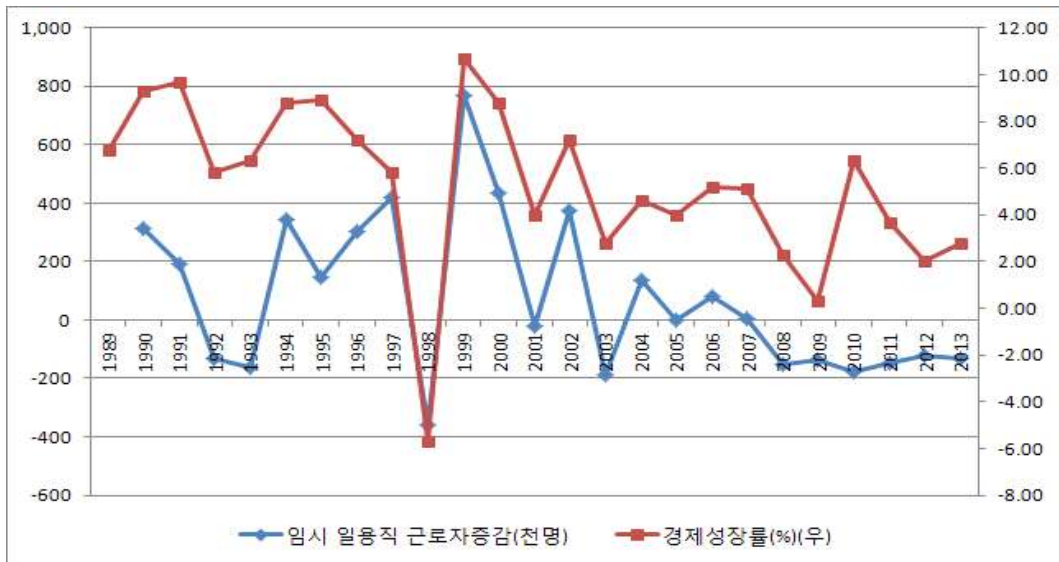
셋째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취업자 중에서 직업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와 직업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구성변동 문제다. 먼저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에는 예를 들어 2008~9년 경제성장률 급락기간 중에도 상용근로자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면서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상당히 견고한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6> 상용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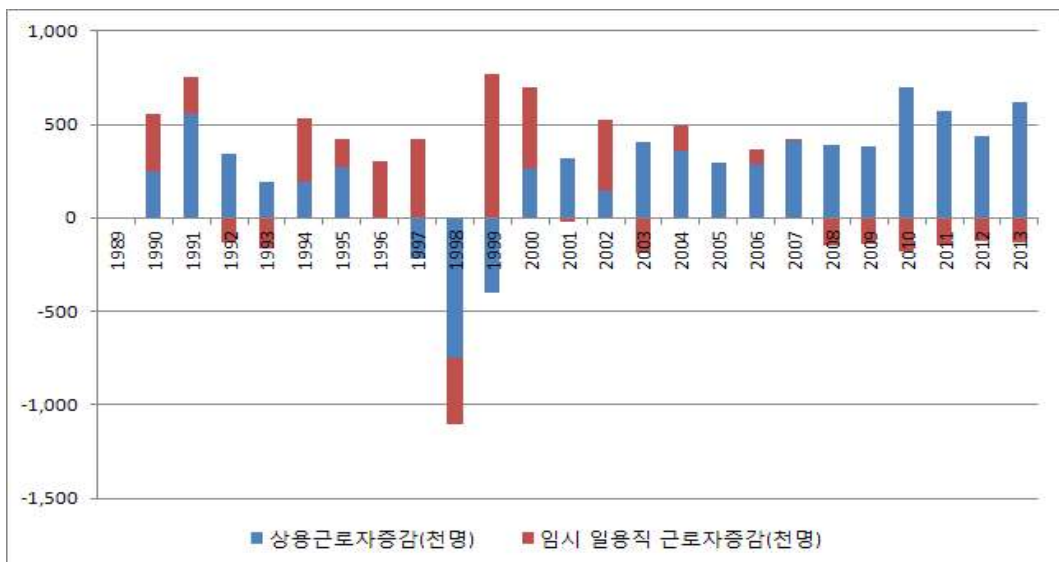
<그림 17>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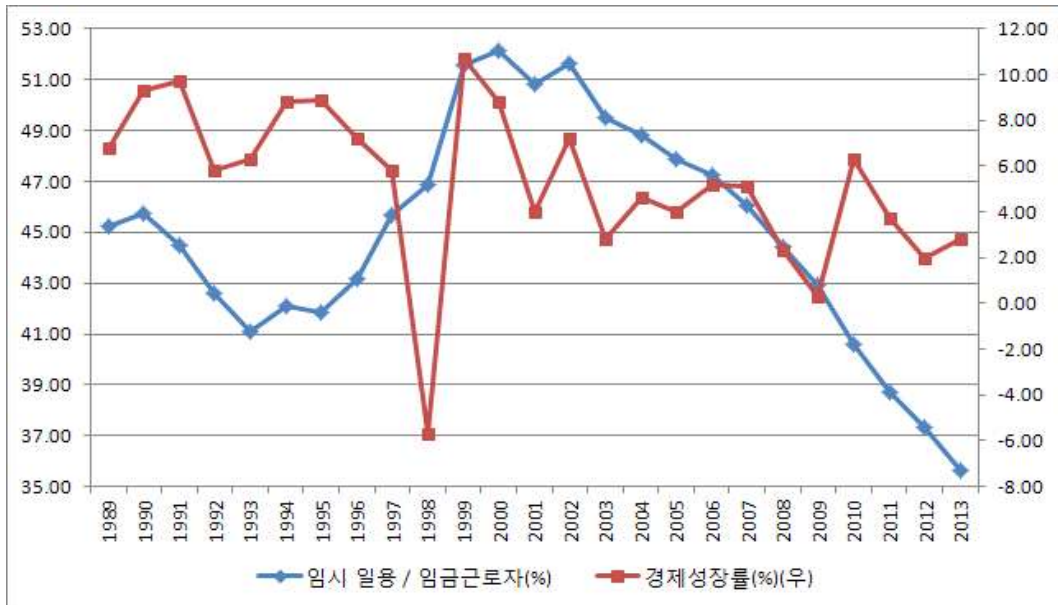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은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11년 경기회복 기간 중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은 경제성장률 추이와 거의 무관하게 2000년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이와 무관하게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어 경기변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이 줄어들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그림 18>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9>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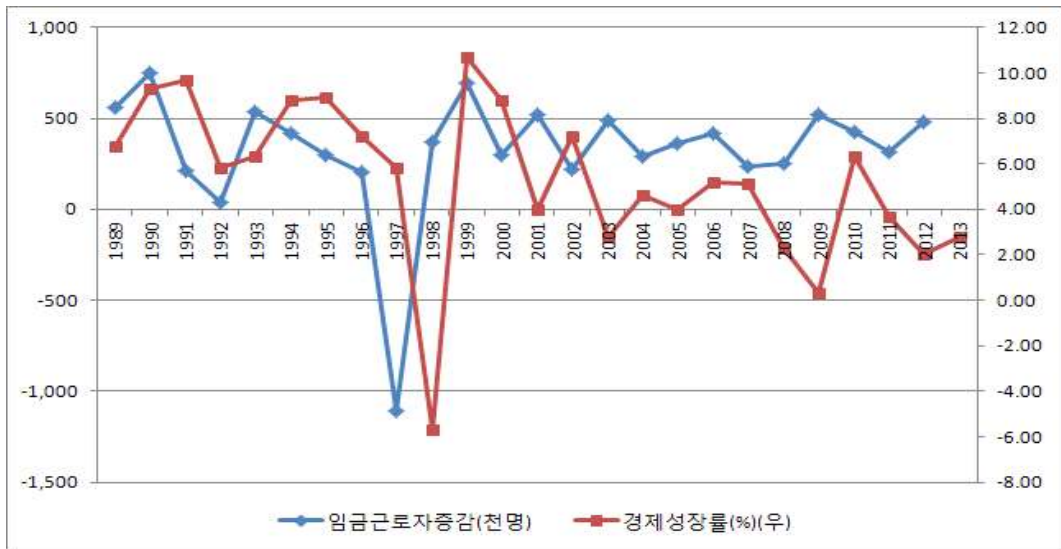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결국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례하여 움직여오다 2008년 이후에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무관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힘입어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근로자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가 경기하락시 경기에 민감하게 직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무관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데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과 더불어 2008~9년 같은 경기하강기에도 해고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직적인 상용근로자와 일자리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비상용근로자 간의 내부자 외부자 (insider outsider)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결국은 외부자(outsider)인 임시·일용직의 실직증가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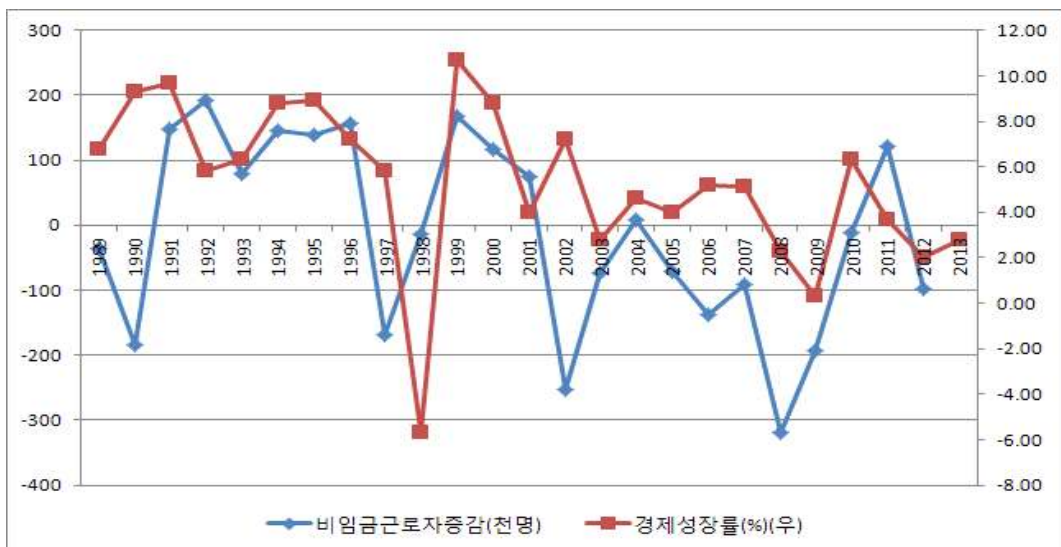
<그림 20> 임금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 위하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 보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변수 간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반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러한 현상은 근년에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무관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 둔화로 실직한 많은 실직자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신규 노동시장참가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비임금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경제성장이 전체취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고용모형 추정식으로 회귀분석해 보았다.

$$ltemp = a_0 + a_1 * lgdp + a_2 * llabor + a_3 * lt$$

$$lordi = a_0 + a_1 * lgdp + a_2 * llabor + a_3 * lt$$

$$ltemp = a_0 + a_1 * lgdp + a_2 * llabor + a_3 * lt$$

$$lself = a_0 + a_1 * lgdp + a_2 * llabor + a_3 * lt$$

ltemp: 전체취업자의 자연대수

lordi: 상용근로자의 자연대수

ltemp: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자연대수

lself: 비임금근로자의 자연대수

lgdp: GDP(10억원, 2005년 가격기준, 불변)의 자연대수

llabor: 노조조직률(%)의 자연대수

lt: 시간변수의 자연대수

즉 고용변수인 총취업자(emp), 상용근로자(ordi), 임시·일용직근로자(temp), 비임금근로자(self)는 경제성장률, 노조조직률, 시간변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한 기술진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변수는 자연대수로 변환(*ltemp*, *lordi*, *ltemp*, *lself*)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사용하였다.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단위근 검정을 행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총취업자(*ltemp*), 임시·일용직근로자(*ltemp*) 변수는 단위근이 있는 I(1) 시계열로 나타나고 상용근로자(*lordi*)와 비임금근로자(*lself*) 변수는 I(2) 시계열로 나타났다. 그러나 (*ltemp*, *lgdp*, *labor*, *llt*) (*lordi*, *lgdp*, *labor*, *llt*) (*ltemp*, *lgdp*, *labor*, *llt*) (*lself*, *lgdp*, *labor*, *llt*)의 조합에 대하여 각각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행한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공적분 검정결과 참조). 따라서 총취업자(*ltemp*) 상용근로자(*lordi*) 임시·일용직근로자(*ltemp*) 비임금근로자(*lself*) 실질국내총생산(*lgdp*), 노조조직률(*llabor*) 및 시간(*lt*) 변수를 추정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추정은 위 추정식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취업자가 0.3%, 평균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용근로자는 0.7%, 평균 약 5만명 정도, 임시·일용직근로자는 0.3%, 평균 약 2만명 정도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0.1%, 약 1만 명 정도 감소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용근로자 고용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성치가 임시·일용직근로자 고용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성치보다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경기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 창출로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추정결과가 근년의 경우 경기하락기에도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무관하게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은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상승기에도 추후 경기하락기에 예상되는 해고의 어려움으로 기업이 신규고용을 기피하거나 경기하락기에는 비대칭적으로 임시·일용직이 더욱 민감하게 일자리를 상실하면서 영세자영업이 증가함으로써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 기술발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 특히 상용근로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기존 근로자들이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 신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선다는 의미다. 노조노직률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조조직률이 증가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면서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눈의 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노조조직률, 기술발전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가장 크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영세자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고용모형 추정 결과

	총취업자 (LEMP)	상용근로자 (LORDI)	임시·일용근로자 (LTEMP)	비임금근로자 (LSELF)
C	3.964890	-8.359821	5.512951	1.580212
(t값)	2.962832	-4.987495	1.567576	0.671945
LGDP	0.285690	0.673601	0.332445	-0.128526
(t값)	4.887760	6.2893004	1.727989	-1.522917
LLBOR	0.003274	0.339741	-0.437310	0.145943
(t값)	0.028091	0.244406	-0.932319	0.852201
LT	-0.038984	-0.192381	-0.056234	0.079231
(t값)	-1.313821	-3.059002	-0.699844	1.685333
종속변수(-1)	0.225719	0.878753		0.955256
(t 값)	1.485163	12.27505		6.127491
R-squared	0.978294	0.968125	0.877020	0.850363
D. W.	1.204194	1.182706	0.433789	2.074491

이상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차적으로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소득 없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이차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감소하여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며,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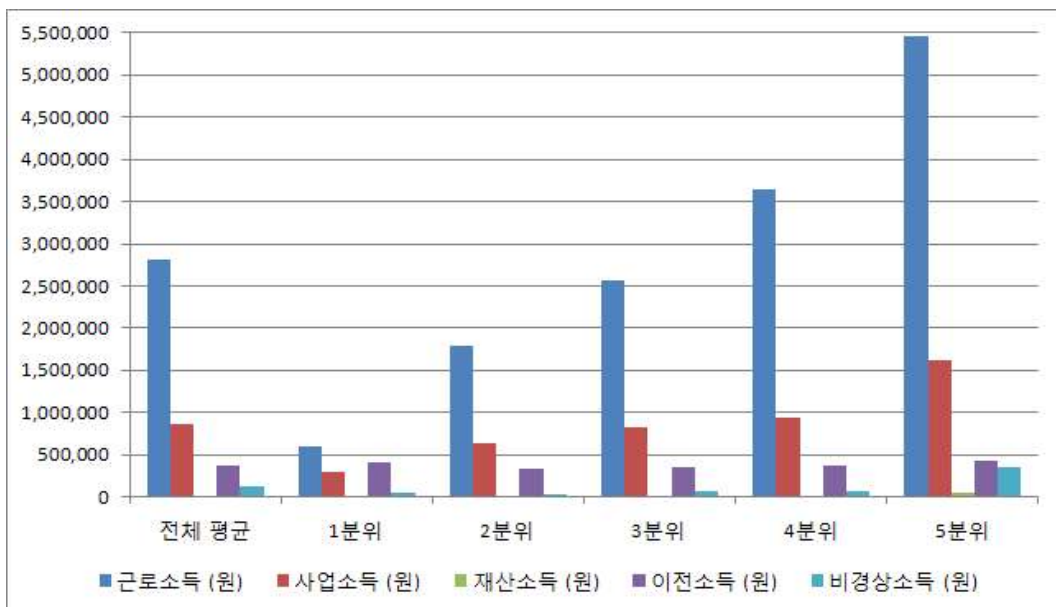
VI. 경제성장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개선효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표와 같다. 소득1분위, 즉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8만원이고 점점 증가하여 소득5분위, 즉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1만원이었다. 소득항목별로는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일 수록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소득의 비중은 3분위 계층이 가장 크고 4분위와 2분위 소득계층이 뒤를 이었다. 1분위 소득계층에서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30%에 달했다.

<표 5>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2분기)

	2014년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원)
소득1분위	1,375,058
소득2분위	2,800,105
소득3분위	3,817,555
소득4분위	5,019,905
소득5분위	7,907,972

<그림 22> 소득5분위별 소득항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2분기)



자료: 통계청

경제성장이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단계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성장이 소득계층별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고용은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득계층별 고용구조에 대한 기초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경제성장이 소득계층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분석한 고용모형 총취업자 추정결과를 이용하였다. 동 분석에서 실질 GDP 1% 증가 시 총취업자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증가가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5분위별로 고용의 가구소득 증가효과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소득5분위별 고용의 가구소득 증가효과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income_i = a_0 + a_1 * lemp + a_2 * lincome_i(-1)$$

$lincome_i$: 소득5분위별 가구소득의 자연대수 (i : 소득분위 $i=1,2,3,4,5$)

$lemp$: 전체 취업자의 자연대수

표본기간을 1990년~2011년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총취업자가 1% 증가하면 2분위계층의 소득이 2.5%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분위계층 2.33%, 1분위계층 2.32%의 순이었고 5분위계층의 소득은 1.6% 가장 작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분위, 3분위, 1분위계층의 가구원들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록 취업률이 높아지고 취업 가운데서도 상용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는 확률이 높은 반면, 4분위, 5분위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의 가구원들은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앞서 분석한 실질 GDP 1% 증가 시 총취업자는 0.3% 증가한다는 고용모형 추정계수와 소득5분위별 고용의 가구소득 증가효과 추정계수를 결합하면 다음 표와 같은 소득5분위별 성장의 소득증가 효과가 산출된다. 즉 GDP 1% 증가 시 소득2분위 계층의 소득이 0.72%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분위 계층의 소득이 0.67%, 1분위 계층의 소득이 0.66% 증가하는 순서로 뒤를 이었다. 5분위 계층의 소득은 0.47% 증가에 그쳐 가장 작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모형 추정식과 소득5분위별 고용의 가구소득 증가효과 추정식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앞서 분석한 GDP 1% 증가가 지니계수를 0.3% 감소시키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 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효과 및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겨가는 고용개선효과가 커서 소득수준이 보다 크게 개선되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표 6> 소득5분위별 고용의 가구소득 증가효과 추정결과

	1분위소득	2분위소득	3분위소득	4분위소득	5분위소득
C	-12.24488	-15.55887	-14.78645	-13.88275	-10.14288
(t 값)	-5.878036	-8.806118	-10.68793	-10.99749	-6.999319
LEMP	2.324075	2.52429	2.334333	2.181864	1.633726
(t 값)	7.278799	9.911628	11.96128	12.33477	8.001292
종 속 변 수 (-1)	0.201802	0.327229	0.418423	0.470869	0.600353
(t값)	2.225692	5.608807	10.16126	13.1303	14.78449
R-squared	0.973591	0.993278	0.997109	0.997986	0.997604
D. W.	1.421975	1.293212	1.619417	2.327925	2.328929

<표 7> 소득5분위별 성장의 소득증가 효과

	고용1% 증가시 소득증가(%)	GDP1% 상승시 소득증가(%)
소득1분위	2.32	0.66
소득2분위	2.52	0.72
소득3분위	2.33	0.67
소득4분위	2.18	0.62
소득5분위	1.63	0.47

VII.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향

앞에서 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파이를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종래 성장과 분배는 상반된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는 정태적인 분석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의미가 크다. 동태적으로 볼 때 성장은 고용창출을 통하여 분배를 오히려 개선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1992년 이전 고도성장기에 분배도 개선되어 왔으나 1990년 전후부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분배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분배만 강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는 실증분석 결과다.

그렇다면 어떤 성장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득분배도 개선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성장정책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첫 번째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는 물론 해외에 나간 한국기업들 마저도 귀국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대책 없이 늘어나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영세자영업이 줄어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된다.

한미FTA, 한EU FTA 등으로 미국이나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국은 더 없이 좋은 입지다. 이런 좋은 입지여건을 규제로 인하여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FTA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990년대 독일에서 산업입지담론이 대두되면서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고 연금도 개혁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좋은 예다.

둘째로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급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청년실업 32만 시대 외국인노동자 80만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청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저임금일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급일자리는 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면서 경제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 채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청년실업이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로 첨단기술의 강소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저기술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 일류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나 부품을 생산할 수 없고 그 결과 수출의 파급효과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아서 수출기업 근로자들과 비수출기업 근로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커져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보고 있는 성장 촉진형 또는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분배정책, 노동시장정책이 좋은 모델이다. 북유럽은 1970~80년대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자 1990년대 들어 성장과 고용이 최선의 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장과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미취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험 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벗어나 실업보험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등 실업보험에 구직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적응하여 보다 나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아니고 평생직업 개념 하에서 단순한 복지(welfare)가 아니라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학습복지'(learnfare)라고도 하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이다. 이와 같은 근로유인적 인적자원투자전략은 저숙련근로자들을 고숙련근로자로 변모시켜 지속적으로 고임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소득재분배정책은 현금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제공에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VIII. 요약 및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의외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립된 주장이 드물다. 이는 아마도 분석대상국의 경제환경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다르고 특히 분배에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개입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는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에 힘입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다 199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최근 까지 소득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에 1990년을 전후해서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경제성장률, 높아지기 시작한 경제개방도, 가속화된 기술발전, 강성화된 노조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고령화의 진전,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성장률, 경제개방도, 기술발전(노동생산성을 대용변수로 사용), 노조조직률 네 변수를 설정하여 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분배를 2년 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가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조조직률 1% 상승시에는 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경로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경로로 나타났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취업자가 0.3%, 평균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용근로자는 0.7%, 평균 약 5만명 정도, 임시·일용직근로자는 0.3%, 평균 약 2만 명 정도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0.1%, 약 1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은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 증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차적으로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여 소득 없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이차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감소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며,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누어서 살펴 본 경제성장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개선효과 분석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 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효과 및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겨가는 고용개선효과가 커서 소득수준이 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1)”, 『연구보고서』, 2011-1, 한국개발연구원, 2011, 6.
-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6.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11.
- 신동운 전병유,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2005.
- 안종범, “한국경제 발전모형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 『경제학연구』, 제51집 제3호, 2006, pp.5-31.
- 원종학 성명재,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 유경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통권 제15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4.
- 유경준, “빈곤감소적 성장: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정책연구시리즈』, 2008-03,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
- 유경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2006, II. 11. 12, pp.1-39
- 유경준 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유향근, “경제성장과 극빈계층의 소득변화 분석: 70개국 횡단면 자료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3호, 2000, pp.71-97.
- 이시욱 이강호 편,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정책과제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하준경, “혁신의 선순환구조 확립: 인적자본 기반 구축”, 함정호 외(2004).
- 함정호 외,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식산업사, 2004.
- Bigsten, Arne, and Jorgen Levin,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Working Paper* No. 32, Goteborg University, Nov. 2000.

- Kaldor, Nicholas, "Alternative Theory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 pp. 83-100, 1956.
- Kruger, Alan B., "How Computers Have Changed the Wage Strcuture: Evidence from Micro Data 1984-89", mimeo, Princeton University, August 1991.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955, pp. 1~28.
- Romer, Paul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5) pp. 1002-1037, 1986.
- White, Howard and Edward Anderson, "Growth versus Distributioe Pattern of Growth Matter?", *Policy Development Review*, 19 (3), 2001, pp. 267~289.

<부록 1> 단위근 검정 결과

		lgini	lgdp	lprod	lopen	llabor
수준 변수	ADF 통계량	-1.179232	-2.080813	1.913483	-0.150917	-2.7062522
	p 값	0.6632	0.2535	0.3201	0.9310	0.0904
1 차 차분 변수	ADF 통계량	-4.941305	-4.760596	-4.612301	-5.7173938	-4.109153
	p 값	0.0010	0.0013	0.0018	0.0002	0.0056

		lemp	lordi	ltemp	lself
수준 변수	ADF 통계량	-1.377956	0.025571	-1.569121	-1.678804
	p 값	0.5730	0.9505	0.4801	0.4253
1 차 차분 변수	ADF 통계량	-4.269213	-2.199306	-4.616618	-2.599480
	p 값	0.0037	0.2124	0.0018	0.1103

<부록 2> 공적분 검정 결과

LGINI LGDP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607729	23.79723	15.49471	0.0022
At most 1 *	0.224354	5.081185	3.841466	0.0242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LGINI LGDP LPROD(-1) LOPEN(-1) LLABOR(-1)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793866	76.32222	69.81889	0.0138
At most 1	0.712670	46.31690	47.85613	0.0693
At most 2	0.603829	22.62157	29.79707	0.2652
At most 3	0.229619	5.029271	15.49471	0.8057
At most 4	0.003821	0.072732	3.841466	0.7874

Trace test indicates 1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LEMP LGDP LLABOR LT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97609	150.9032	47.85613	0.0000
At most 1 *	0.688508	36.22185	29.79707	0.0079
At most 2	0.436572	14.06058	15.49471	0.0813
At most 3	0.153221	3.159986	3.841466	0.0755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LORDI LGDP LLABOR LT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92302	134.1613	47.85613	0.0000
At most 1 *	0.741806	41.69243	29.79707	0.0014
At most 2 *	0.567856	15.96562	15.49471	0.0425
At most 3	0.001298	0.024671	3.841466	0.8751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LTEMP LGDP LLABOR LT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88435	129.8986	47.85613	0.0000
At most 1 *	0.833068	45.16279	29.79707	0.0004
At most 2	0.441802	11.14954	15.49471	0.2025
At most 3	0.003769	0.071744	3.841466	0.7888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LSELF LGDP LLABOR LT 모형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57003	92.92363	47.85613	0.0000
At most 1 *	0.701264	33.13776	29.79707	0.0079
At most 2	0.334738	10.18207	15.49471	0.0813
At most 3	0.120431	2.438151	3.841466	0.0755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부록 3>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Date: 08/14/12 Time: 18:26

Sample: 1990 2011

Lags: 1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Prob.
LGDP does not Granger Cause LGINI	21	9.49763	0.0064
LGINI does not Granger Cause LGDP		4.46504	0.0488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Date: 08/14/12 Time: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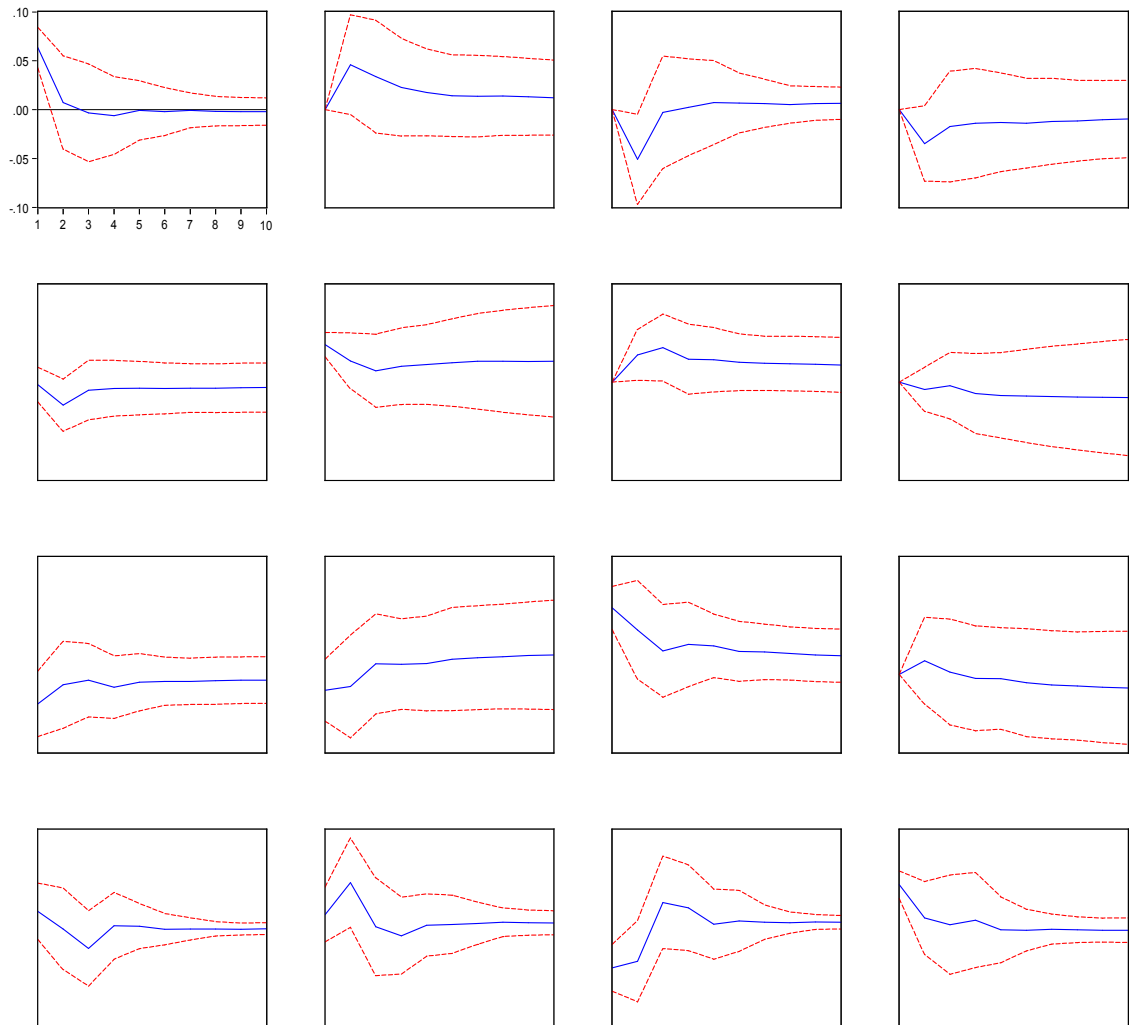
Sample: 1990 2011

Lags: 2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Prob.
LGDP does not Granger Cause LGINI	20	8.57910	0.0033
LGINI does not Granger Cause LGDP		1.41541	0.2735

<부록 4>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lopen(-1) lprod(-1) lgdp lgini) VAR 모형



(llabor(-1) lprod(-1) lgdp lgini) VAR 모형

